

## 생산적 복지의 초석 - 사회발전안전망



鄭敬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과학기술의 발달로 산업생산성이 눈부시게 증가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인간이 더불어 공존하여야 하는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어느 복지국가 유형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실직에 의해서 배제되고, 소득불균형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급여에 의존적인 빈곤계층은 빈곤의 덫에 걸려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간에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져서 기아에 허덕이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은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

세계화는 모든 국가를 무한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각국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혁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에 패배하고 배제된 사람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다시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정비하였으며,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도와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자리로 복귀시키게 되었다.

사회안전망은 실직, 노령, 질병, 재해,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이다. 사회안전망을 통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빈곤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함으로써 평등성을 달성하여 제약된 자원배분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한다. 자원배분은 자원의 공급과 자원의 수요를 균형시키는 과정이다. 생산되는 총자원의 범위 내에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빈부가 공존하고 주어진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평등성과 효율성을 같이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평등성의 복지이념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의미한다. 즉, 생산적 복지는 인간은 누구나 사

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초생활의 권리가 있다는 전제와 교육이나 일을 통한 능력개발과 자기실현으로 사회의 생산성에 공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념을 접목시킨 것으로서 평등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려는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이다.

종래의 사회복지가 선별적이고 시혜적이며, 구빈적 특성이 강했다면, 생산적 복지는 시민권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동시에 인간개발을 통한 자활, 일자리 창출 등 생산 기여적 복지를 지향함으로써 종래 사회복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복지지출을 생산적 투자로 보고 일자리 알선과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인간개발을 지원하며 근로연계복지에 기반하여 체계

적으로 자활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4대 사회보험(1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차 사회안전망)을 제정(1999년 9월)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위한 자활사업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복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자 함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고, 생산적 복지의 핵심인 자활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다. 더욱이 평등성과 효율성이 화학적으로 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발전의 동인을 자극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여  
'발전과 균형'을 조화시키는  
사회발전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동인을 자극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여 '발전과 균형'을 조화시키는 사회발전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발전안전망은 첫째,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되, 둘째, 사회발전 동인을 위한 투자동기, 근로동기, 인력개발,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셋째, 이를 위한 노동취업망, 사회적 일자리망, 노령인력망, 사회봉사망 등의 생산적 복지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발전안전망의 구축으로 생산적 복지의 초석이 되고, 역동적인 복지국가 건설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